

독자권익위원 칼럼

이지안

잇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백세시대’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는 여성은 117세로 세계 최고령자다. 모든 사람이 이 여성처럼 백세를 한참 넘어 장수하는 건 아니지만 평균 수명이 백세에 가까워진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법률에 정해져 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 65세인 곳도 있지만 만 60세 이전에는 정년퇴직을 시킬 수 없다. 하지만 그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이들도 많다. 기업에서 평퇴자를 접수해 이때 신청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에 +α를 붙여 지급한다.

이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한다. 새로운 인생에 뛰어들 이들은 퇴직금으로 창업하거나, 여행이나 운동을 하며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시니어가 얼마나 될까? 정년에 딱 맞춰 퇴임 하더라도 살아온 기간만큼 다시 살아갈 날이 갑갑한 이들도 많다.

수중에 재물이라도 있다면 스트레스가 덜할 테지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거기에 건강까지 좋지 않다면 앞날이 암울하기만 할 것이다. 거기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많던 적건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지만, 퇴임 후에는 집에 틀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박혀 나오지 않기도 한다.

백세시대. 살아온 기간만큼 살아가야 하는 만큼 무조건 장수하는 것보다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이 흔들리면 제2의 인생도 흔들린다.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운동, 꾸준한 두뇌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사회관계망도 좁아진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파크골프가 시니어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용과 체력적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에 추천할 만하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적극적인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매장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AI가 폭넓게 퍼지고 있다. 디지털 문명이 되면 노후에 사회의 자연스럽게 스며들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마다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키오스크 활용하는 방법, AI로 음악 만들기·영상 만들기 등 강의가 개설된 곳이 많다. 지자체에서 강의료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강의로만라도 배울 기회가 제공되기에 경제적 부담도 적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남은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다. 목표가 있으면 그에 맞춘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 물론 위에 열거한 모든 것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와 정부,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교육과 전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시행하고 창업 및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나 기관의 보여주기식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재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시니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문화와 여가 활동을 여유롭게 즐기고 건강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역 내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음식, 스포츠 등 문화동아리를 운영해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를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 온 경험자며 귀한 인재들이다. 또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정책과 제도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나 멘토링,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되면 시니어들은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백세시대의 노년은 더 이상 어둡고 암울하고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다. 지금의 고령 세대는 누구보다 더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활짝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 즉 제2의 인생이다.

기고

박재홍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 광역본부
광역시고조사센터장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827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올해도 전반기에만 449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필자는 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를 통해 기술적 원인 규명과 동종 및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사고조사를 하다 보면 사고 유형 및 원인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올해 필자의 기억에 가장 안타깝게 남아있는 2건의 사고가 있다. 하나는 올해 3월 화물자동차 적재할 상부 1.3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이며 다른 하나는 올해 4월 사다리 작업 중 1.9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작업장 안전,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지킵니다

2m가 채 되지 않는 낮은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였으며 돌아가신 작업자 모두 보호구, 즉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는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서 말한 사례처럼 2m 내외의 낮은 높이에서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조사를 하는 동안 내내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추락 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핵심은 머리 부상이다. 바닥이 딱딱한 콘크리트나 시멘트인 산업현장에서는 불과 1~2m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떨어지는 물체뿐만 아니라 작업 중 추락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잠깐이니까’, ‘불편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계를 사고 사례는 이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

과를 낳는가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2m 이하의 낮은 높이에서 떨어진 단순 추락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너무나도 흔하며 앞서 언급한 2건의 사고 역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불러온 참사는 아니었을까.

이러한 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안전모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재해 예방책이라는 사실이다.

‘안전’은 단발적인 캠페인이나 일회성 단속으로 정착되지 않는다.

기본 수칙 준수는 습관이자 문화가 돼야 한다. 사업주와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안전은 나부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또 사업주는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은 방심이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목격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작업장 안전은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설

‘2100억 운영비 분쟁’ 광주 지켜보고 있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자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운영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SRF 운영사의 과도한 배상요구에 반발,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분쟁 중재와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분쟁은 2013년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시설을 운영해 온 포스코이앤씨가 2018~2022년 4년간 가동 중단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협약에 명시된 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응했다.

당초 양측은 ‘운영비용·사용료 78억원’을 두고 조정기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측이 중재과정에서 손해액 청구 범위를 모든 손해로 확대해 2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재 도중 청구에 변경이 제한되지 않은 현행 중재법의 허점을 이용해 배상액을 27배나 늘린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손해를 광주시에 모두 전가시킨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단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중재 절차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중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배상금 부담 가능성이 있는 광주시는 ‘중재 중단’을 요구하며 심리를 연기한 뒤 포스코이앤씨측과 운영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광주시는 현행 중재절차의 맹점을 이용한 포스코이앤씨측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정면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기로 했다. SRF 시설 성능이 미흡해 가동중단이 장기화돼 폐기물을 매립할 수 밖에 없어 매립장 수명이 5년 단축돼 6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별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재도중 2100억원 배상요구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중재 범위를 벗어난 ‘권한 없는 결정’이라며 현행 중재 절차에 대해서도 공식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이번 에 문제가 된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광주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측은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번 분쟁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때가 아닌가 싶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뿌리 뽑아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2023년 연간 10~20건이었던 납치·감금 범죄가 지난해 221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학생 사망사건까지 발생한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 실종신고가 광주에서 3건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문의전화와 실종신고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정부차원의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지에서 한인사건 처리 전담경찰관 설치, 경찰영어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인력 30명 보강을 추진하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동남아행을 유도하는 각종 게시물에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게시물에는 현지에서 텔레마케터, 서류 전달, 동행 여행 등을 하면 매달 최소 700만원에서 수 천만원을 벌 수 있고 하루 3끼 식사와 숙소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최근 일부 게시물에는 국내 여권을 의식한 듯 ‘감금은 절대 없으며 외국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모집 장소를 캄보디아가 아닌 태국,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 국가로 적어 놓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 게시자와 1대 1 대화를 요청하고, 이들이 짜놓은 대본에 따라 캄보디아 등으로 출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늦게 알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할당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극심한 고문에 시달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SNS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같은 글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경찰이 이들 플랫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SNS에서 벌어지는 일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의 경우는 현지 사정 등으로 우리나라 치안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고수의 보장 취입에 흑화 가능성이 큰 젊은 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이같은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취재수첩

골목형상점가에 관심을

송 대 영

경제부 차장대우



골목형상점가가 침체된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으로 밀집 구역 점포 개수 기준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전통시장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상점이 상인들도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골목 활성화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흐름 변화, 장기간 경기침체가 맞물려 거리에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골목형상점가는 축제를 개최하며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기 위해 팔

을 걸어붙였다.

지난 8월 23일 광주 광산구 첨단1동 미관광장(쌍암동 666-11)에서 ‘광산 골목상권 활력축제’가 열렸다.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회원들이 직접 콘텐츠 기획에 참여해 키즈폴, 베틀시장, 골목상점가 홍보, 공연, 먹거리가 어우러진 콘텐츠를 꾸몄다.

여수 종포상가 골목형상점가도 조직 이후 처음으로 8월 22일 ‘다시뛰자 낭만 해물삼합거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서대현 전남도의원, 원민호·진명숙 여수시의원을 비롯해 관광객, 주민이 베틀시장, 거리 공연, 톨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종포해양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하며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골목형상점가가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분위기다. 좋은 출발을 했다. 옹두사마가 되지 않도록 상점가 회원의 단합,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관심과 지원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농축산물 절도피해 방심은 금물

가을 수확철로 접어들면서 도로변에 콩, 참깨를 비롯해 한창 수확중인 벼 밭쪽에 농민들의 하루가 바쁜 시절이다.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 수확은 그야말로 농민들의 한해 농사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결실의 기쁨에 앞서 절도 피해를 당한다면 농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농촌지역은 출산을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가 문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보관 및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린 전문 절도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야간에는 도로변에 건조해 둔 농작물이나 민가와 떨어진 외딴 곳에 건조하는 수확물의 경우 절도범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범죄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설권에 비해 통행인이 적고 CCTV, 블랙박스 등 치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범죄피해 발생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10월~11월 농축산물 절도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농산물 절도예방 노력과 더불어 농가에서도 긴 시간 공들여 수확한 농작물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농민들의 깨어있는 자위방범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방범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덕형 정성경찰 삼서마을소장

회장 양진석 부사장·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060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 원 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열간)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지사 ☎978-7090